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원중심대학 운영과 학문의 균형 발전

신의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대학원 교학처장

1. 교육부의 제도 개선과 대학원중심대학 추진

그년 8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개혁 관련 대학원제도 개선 추진(안)에는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석·박사과정의 통합운영, 대학원 학사관리에 자율권 부여, 주간 전문대학원 설치의 장려, 휴학생만 큼 추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정원 관리 방식 변경, 그리고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던 정원의 위탁교육생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보다 더욱 반가운 것은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히고 우수대학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 우수한 학생, 우수한 시설 및 연구환경 등 기본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과 학사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KAIST와 포항공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수-학생 비율, 교육 및 연구시설 등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이 전실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를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은 고사하고 학부 프로그램마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각 대학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강화하는 등 선의의 경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교육에서도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통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원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고, 그 중 몇몇 대학은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간과되어서는 안 될 문제는 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선별적 지원정책이 학문의 균형발전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공계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인문사회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학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미국 대학원중심대학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연세대 대학원의 계열별 운영여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우수 대학원 육성정책이 균형있는 학문발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수한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학원중심대학의 학문분야별 순위의 분석을 통하여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대학원 제도와 학문의 균형 발전

필자는 1980년과 198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സ데나시에 있는 CIT(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일반적으로는 칼텍으로 불리고 있음)와 로드 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시에 있는 브라운 대학에서 각각 1년씩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 CIT와 브라운 대학은 1995년도 *U.S. News*

and World Report 지가 실시한 미국 대학 학부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각각 7위와 9위에 오른 명문대학들이다. 이 중 CIT는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미국 5위 이내에 속하는 세계적인 연구대학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포항공대가 CIT를 표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CIT는 학부와 대학원생의 수가 각각 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대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대학이 미국 전체에서 20위권 이내에 드는 우수한 대학원과정의 경제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다. MIT도 같은 경우인데, 이공계대학으로 출발한 이들 대학이 경쟁력 있는 사회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공계 학생들도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대학의 교육정책에서 나왔다고 본다. CIT에는 경제학 프로그램이 Social Science Division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학 및 여타 사회과학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CIT는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아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개별지도가 가능하고, 대학원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성과의 창출이 보편화되어 있다.

브라운 대학은 아이비리그의 하나로 학부교육에서는 하버드에 비견될 정도로 우수한 학생과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대학원생의 교육보다 학부생의 교육에 더욱 신경을 쓰며, 이러한 점에서 대학원 연구중심대학인 하버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브라운 대학은 매우 신축적인 학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여 준다.

우리나라의 포항공대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 교수, 시설과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단시일 내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이공계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의 여타 대학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서 이공계 교육을 시켜왔

는가를 생각할 때 실망감이 들기도 한다. 대학 스스로가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 아래에서는 국내 재벌기업들이 대학원에 과감히 투자하거나 정부가 앞장서서 세계 일류 수준의 대학원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이전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학들은 국내 대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교육 및 연구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3년간 *U.S. News and World Report* 지가 행한 미국 대학원의 분야별 순위분석을 토대로 미국의 우수한 연구 중심대학들이 과연 어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원 학문분야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스탠퍼드, 하버드, 시카고,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등 명문 사립대학과 버클리, 미시건, UCLA, 위스콘신 등의 명문 주립대는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사회과학분야와 영어, 역사, 심리학 등의 인문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있다. 특히 스탠퍼드와 버클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위 5위권 이내에 속한다.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분야와 전산과학, 지질학 등의 과학분야에서는 스탠퍼드, 하버드, 프린스턴, 코넬, 예일, 컬럼비아 등 명문 사립대학과 MIT, CIT 등이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버클리가 유일하게 주립으로는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스탠퍼드와 MIT, 버클리는 위의 전 분야에서 상위 5위권에 속한다.

○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영, 법학, 공학, 의학의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은 스탠퍼드에 불과하고, 하버드는 경영, 법학, 의학 연구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이나 공학은 20위권

밖이다. 펜실베니아, 예일, 시카고, 컬럼비아 등 명문 사립대학들도 공학분야는 없거나 순위가 상위에 속하지 못하고 있다. 버클리는 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미시건은 주립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 기초과학분야와 공학분야에서 최상위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스탠퍼드와 MIT, 버클리, 코넬 대학 등이며, 미시건은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였으나 공학분야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 치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관리 등 건강 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최상위권에 속해 지금까지 분석한 분야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순위 분포를 보이고 있다.

○ 이상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는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의 대부분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동부의 명문사립대학이 경영학, 법학, 의학 연구분야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공학 전문대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그 수준이 상위권에 속해있지 않으며 스탠퍼드가 유일하게 공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는 스탠퍼드 대학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비해 나중에 설립되었고 공학대학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체가 인근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특수한 경우라 하겠다. 공학대학원과 의학연구대학원은 모두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분야이므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세계 일류수준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학원의 분석에서 학문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과정은 전통 명문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대학은 이공분야를 육성·지원하기에 앞서 모든 응용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 역사,

심리, 국학 등의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문사회분야는 이 공계와는 달리 연구소, 산업체 등의 외부 지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육성책이 이공계 분야와는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기초과학은 모든 응용과학 및 공학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과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이다. 대학원 기초과학의 발전은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과도 연계되어 있어 미래의 우수한 기초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전통과 우선순위에 따라 몇 개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먼저 각 대학의 자력과 산업체의 지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우수한 공학대학원은 MIT와 스탠퍼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학대학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함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산업 및 연구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공학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공학대학원은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시설 및 연구 기자재 확보와 우수학생 유치능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한국의 대학원 현황 : 연세대

1)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구성

연세대에는 일반대학원과 10개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중 연합신학대학원과 국제학대

<표 1> 연세대 대학원 정원 구성

구 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학과수	정 원	학과수	정 원
일반대학원	53	2,337	51	1,240
연합신학대학원	5	105		
행정대학원	1	410		
언론·홍보대학원	1	101		
관리과학대학원	1	90		
경영대학원	2	580		
국제학대학원	2	120		
특허법무대학원	4(전공)	40		
산업대학원	1	565		
보건대학원	5	145		
교육대학원	22(전공)	670		
소계	44	2,826		
합계	97	5,163	51	1,240

학원은 주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학대학원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 일반대학원의 정원은 석사과정 2,337명, 박사과정 1,240명으로 모두 3,557명이며,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2,826명이다. 전문대학원에서는 교육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행정대학원이 410명에서 670명까지 비교적 많은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의 전문대학원은 10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허법무대학원의 정원은 40명이다(<표 1> 참조).

2) 일반대학원 계열별 정원구조

연세대 대학원 정원은 석사학위과정이 2,337명으로 여기에는 자연계 학연협동과정 88명과 비교문화 협동과정 20명, 인지과학 협동과정 1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사회계는 22개 학과 843명, 이학계는 8개 학과 382명, 공학계는 9개 학과 594명, 비이공자연계가 8개 학과 121명, 의학계가 4개 학과 279명이다. 박사학위과정은 정원이 1,240명이며 여기에는 자연계 학연협동 91명과 협동과정 2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사회계는 22개 학과 305명, 이학계는 8개 학과 138명, 공학계는 9개 학과 346명, 비이공자연계가 68명, 그리고 의학계가 4개 학

〈표 2〉 연세대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정원

구 분	학부 정원수 (A)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정원(B)	B/A(%)	정원(C)	C/B(%)
인 문 사 회 계	10,000	843	8.4	305	36.2
이 학 계	2,760	382	13.8	138	36.1
공 학 계	4,600	594	12.9	346	58.2
자연계(바이공)	1,800	121	6.7	68	56.2
의 학 계	1,920	279	14.5	272	97.5
자연계학연합동	-	88		91	-
협 동 과 정	-	30		20	-
합 계	21,080	2,337	11.0	1,240	53.1

과에 272명이다.

인문사회계 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337명 정원에 863명(비교문화 협동과정 20명 포함)으로 36.9%이며, 박사과정의 경우 1,240명 정원에 315명(비교문화 협동과정 10명 포함)으로 24.6%이다. 학부의 경우, 총정원 21,080명 중 인문사회계가 10,000명으로 47.4%를 점유하고 있음에 비교하여 볼 때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공계의 비중

이 크고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가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 재학생 대비 석사학위과정 정원비율을 계열별로 보면 이학계가 13.8%, 공학계가 12.9%로 인문사회계의 8.4%에 비해 높다. 석사학위과정 정원 대비 박사학위과정 정원 비율은 의학계가 97.5%로 가장 높고 공학계가 58.2%이며, 인문사회계와 이학계는 36% 수준으로 비슷하다(〈표 2〉 참조).

이상의 분석에서 밝혀진 계열별 대학원 정원 구조의 차이는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전공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에 대한 대학원 정원이 교육부에 의해 계열별로 결정되고, 수년간 이공계 위주의 증원정책이 시행되어 온 결과, 이공계가 비대해지고 인문사회계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학별 특성과 학문적 전통을 무시한 채 산

〈표 3〉 연세대 95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입학전형 계열별 경쟁률

〈석사과정〉

구 分	특 별 전 형			일 반 전 형			합 계		
	지원자수	합격자수	경쟁률	지원자수	합격자수	경쟁률	지원자수	합격자수	경쟁률
인 문 학	63	24	2.63	153	54	2.83	216	78	2.77
상 경 학	107	25	4.28	238	47	5.06	345	72	4.79
이 학 학	116	41	2.83	256	56	4.57	372	97	3.84
공 학 학	182	73	2.49	367	116	3.16	549	189	2.90
신 학	30	5	6.00	32	5	6.40	62	10	6.20
사 회 과 학	57	11	5.18	96	15	6.40	153	26	5.88
법 학	30	4	7.50	43	12	3.58	73	16	4.56
음 악	17	5	3.40	30	4	7.50	47	9	5.22
생 활 과 학	35	8	4.38	44	10	4.40	79	18	4.39
교 육 과 학	14	2	7.00	33	7	4.71	47	9	5.22
의 학	2	1	2.00	227	46	4.93	229	47	4.87
치 의 학	—	—		72	17	4.24	72	17	4.24
간 호 학	11	3	3.67	16	3	5.33	27	6	4.50
보 건 과 학	—	—		17	17	1.00	17	17	1.00
비 교 문 학	—	—		6	5	1.20	6	5	1.20
인 지 과 학	—	—		9	5	1.80	9	5	1.80
합 계	577	202	2.86	1,639	419	3.91	2,303	621	3.71

〈박사과정〉

구 분		학	일	반	전	정
			지원자수	합격자수	경쟁률	
인 문	학	66	23	2.87		
상 경	학	21	6	3.50		
이 공	학	47	27	1.74		
신 사	학	90	62	1.45		
회 법	학	18	3	6.00		
과 음	학	10	3	3.33		
교 환	학	8	4	2.00		
의 육	악	1	—	—		
치 간	학	21	9	2.33		
보 전	학	13	4	3.25		
비 교	학	78	20	3.90		
인 지	학	30	8	3.75		
과 학	학	21	3	7.00		
계 학	1	—	—			
문 학	2	2	1.00			
학 학	8	4	2.00			
합 계		435	178	2.44		

업 및 연구 인력의 확보가 대학원 교육에서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획일적인 대학원 정책이 대학원의 학문별 정원구조를 불균형 상태로 왜곡시켜 놓았다. 현재의 대학원 정원이 결코 연세대의 전공영역별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님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의 95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전형 경쟁률은 석사과정의 경우 3.71:1, 박사과정의 경우 2.44:1이었다. 계열별 경쟁률을 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인문학계의 경쟁률이 2.77:1, 사회과학계 5.88:1, 이학계 3.84:1, 공학계 2.90:1로서 공학계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인문학계의 경쟁률이 2.87:1, 상경학계 3.5:1, 사회과학계 3.33:1인 데 비해 이학계 1.74:1, 공학계 1.45:1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초 공학계의 정원이 여타 계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선발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

으나, 일부 공학계의 경우 정원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원이 전문인력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수준높은 연구인력을 키우는 곳이라면 현재의 대학원 정원제도는 대학원 교육의 목적별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즉, 학문후계자와 창의적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대학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그리고 재교육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대학원이 분리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이 전문인력 양성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순수과학 및 인문사회분야의 대학원 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불합리한 대학원 운영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원은 산·학·연 협동을 통해 전문인력의 수요처로부터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순수학문 위주의 일반대학원은 그러한 외부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별도의 배려를 해주어야 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문사회분야는 전문대학원의 교육과는 달리 당장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학문의 연구와 기초과학의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현재 연세대의 경우, 인문사회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 이외에 공학, 의학, 경영학, 교육학, 신학 등 미국에서는 전문대학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모든 분야가 일반대학원에 포함되어 있다. 학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간대학원이 학문계열별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전국에는 100여 개의 일반대학원과 200개가 넘는 전문대학원(엄밀히 보면 특수대학원이라고 불러야 할 것임)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 대학원과 상이한 환경에 있는 대학들도

많을 것이며, 따라서 대학원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부가 대학원제도 개선 추진(안)에서 밝힌 주간 전문대학원 운영이 본격화되면, 각 대학은 전문대학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일반대학원은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분야에 전념함으로써 학문적 특성을 살린 대학원 운영과 정원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계열별 연구비 수혜액

대학원의 발전은 대학원 학생정원의 배정 및 정부의 국책연구비 지원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우수 대학원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학문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연세대의 94년도 교수 연구비 수혜액을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94년의 경우, 자연계 교수 1인당 연구비는 약 4,6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93.5%가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수혜에 의한 것이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교수 1인당 약 8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자연계의 17.7%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의 1/4 정도가 교내 연구비 자급에 의한 것이다. 자연계의 경우, 산업체로부터의 연구비 수탁 이외에도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하는 ERC, SRC, 교육부의 이공계 중점 육성지원사업 그리고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을 통한 대형연구비 지원이 있으나, 인문사회계의 경우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와 일부 민간 연구재단의

<표 4> 94년 연세대 교수의 교내·외 연구비 수혜액
(단위: 만 원)

구 분	교 내	교 외	계	전임교수	교수 1인당 연구비수혜액
인문사회계	50,420 (25.7%)	145,450 (74.3%)	195,870 (100%)	241	812.7
자연계	89,114 (6.5%)	1,280,783 (93.5%)	1,369,897 (100%)	299	4,581.6
* 예체능계 및 의대 임상교수 제외					

연구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연구비 수혜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공계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학교의 대응기금 출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에 대한 교내의 연구비 지원은 앞으로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인문사회계에 대한 국책연구비 지원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맷는 말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원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은 학술학위의 취득을 위한 일반대학원과 전문학위의 취득을 위한 주간 전문대학원 및 야간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대학원중심대학은 일반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과학과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문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주간 전문대학원이 신설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주간 전문대학원에서는 석사 이외에 박사학위도 수여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통해 경쟁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학문후계자의 양성과 전문인의 양성을 주로 하는 대학원중심대학에서는 야간 특수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이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원중심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재정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의 야간강의는 가급적 막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급인력의 양성과 연구활동을 위주로 하는 우수 연구중심대학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여 야간 대학원 운영을 포기함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에 대한 정원 배정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대학원 정원을 계열별로 배정하고 있다.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지금과 같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학문후계자와 고급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일반대학원은 엄격한 설립기준을 정하여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제한을 없애 타대학의 우수 졸업생을 선발하여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기초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자연과학 기초뿐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획득과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연구기기 및 연구조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실증적 연구는 많은 연구비를 필요로 하며, 세계적 수준의 좋은 연구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이공계에 못지 않은 연구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세번째 과제는 정부의 이공계 위주 연구비 지원 정책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상대적 위축과 침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성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지원 정

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제한된 연구재원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면 학사관리는 각 대학에 일임하고, 정부는 제도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신축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가 분야별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신의순/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 교수와 브라운대 교환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학원 교학처장을 맡고 있고,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자원경제학』, 공저로 『중국적 사회주의와 개혁정치』, 『한국의 에너지수요와 생산요소간 대체성 분석』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정책발전방안 연구”, “전력산업구조 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환경동향과 산업정책 방향” 외 다수가 있다.